

제3차 NAP 수립을 위한 NGO 협의 기초자료

【 생명권, 신체의 자유, 범죄피해자 】

제3차 NAP초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국제기구 권고	제2차 공청회 제시의견
권리	과제	소관부처			
생명권	가. 사형제도 개선	법무부	○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과 사형제 폐지 및 사형대체형벌의 도입과 사형 집행의 지속적 중단	○ 제3차 UPR -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사형제) 비준	○ 사형제도 개선 - 제1, 2차 NAP 보다 구체화 및 발전된 계획 필요 - 사형제 폐지 여론과 해외 입법례 정밀검토 필요 - 개별 법정형에 있어 사형의 축소, 절대적중신형 도입 등 법·제도 개선 검토 필요
신체의 자유	가. 인신구속제도 개선	법무부		○ 제3차 UPR - 고문행위가 범죄의 중대함에 상응하는 형벌로 처벌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 김현희씨와 12명의 탈북 여성에 대한 즉각 석방·책임자 조치 -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부 노력 지원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개발 및 이행 - 여성·아동 인신매매 및 성매매 피해자의 사법적 지원과 보호 보장 - 인신매매 처벌 노력 강화 및 예방을 위한 조치 -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조치 강화 및 인신매매 방지 위한 국가적 계획 수립 - 정신병원 입원 장애인에 대한 부당대우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메커니즘 수립 - 정신병원 강제입원 폐지 및 정신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방지 - 모든 환경에서의 체벌 금지 - 취학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의 강제출국 및 보호소 구금 완전한 중단	○ 교정시설 의료제공 개선 과제 추가 필요 - 의료인력 충원 - 전문 진료과목 개설 - 수용자 보험급여정지제도 재검토 - 외부진료예산 증액 필요 ○ 외국인 장기보호 방지대책 - 기간 상한이 없고, 보호개시 및 연장 결정에 (준)사법기관이 개입하지 않으며, 청문절차가 부재하는 등의 현행 제도 운영상 문제 개선 필요 - 신속한 난민심사보다 실질적 난민심사가 중요 ○ 인신보호법 관련 문제 - 인신보호구제청구의 대상에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보호된 사람 포함 필요 - 강제퇴거명령을 (준)사법기관이 발령하도록 개선 - ① (준)사법기관에 의해, ② 구금 자체의 당부를, ③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절차가 개별 법률에 부재하는 경우, 인신보호구제의 대상이 됨을 명시 ○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보호’가 갖는 문제점 - 보호 중 조사기간을 1~2주의 단기로 한정하고, (준)사법기관이 연장을 허가하도록 하며, 보호기간 상한도 60~90일로 축소 필요 - 탈북민센터 운영을 통일부가 주관하고, 범죄 혐의자 등만 국정원에 이첩하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
	나. 형사절차적 권리의 증진	법무부	○ 형사사법절차상의 피의자·피고인의 권리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 변호인의 피의자·피고인의 권리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국선변호인 제도를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에게 단계적 확대		
	다. 대용감방 개선	법무부			
	라. 수용자 과밀수용 해결을 위한 조치	법무부	○ 수용자의 사회복귀(更生보호)를 위한 구체적·체계적 방안 마련 - 교도소 증축, 교도관 증원 등 과밀수용 개선		
	마. 다양한 교정 및 처우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 수용자의 사회복귀(更生보호)를 위한 구체적·체계적 방안 마련 - 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수형자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바. 재범위험성 평가 개선	법무부			
	사. 인권친화적 보호·위탁소년 처우 강화	법무부	○ 인권친화적 보호·위탁소년 처우 강화 - 소년분류심사원 증설 및 의료소년원 확대		
	아.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약물치료명령의 시행에 따른 인권침해 최소화 추진	법무부	○ 약물치료명령(화학적 거세)의 인권침해 가능성의 최소화		
	자.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보호 과정 상 인권보호 지속 추진	법무부			
	차. 외국인 장기 보호 방지대책 지속 추진	법무부	○ 보호외국인에 대한 인권 침해 방지 - 보호개시, 계속 및 연장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절차 마련 - 보호기간 제한 및 보호 해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 확충		
파. 인신보호제도 활성화를 통한 인신의 자유 보장	법무부				
사상 양심 종교	가. 「국가보안법」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적용	법무부	○ 국가보안법 관련 문제 - 인권보장 차원에서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방지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7조 규정의 정비 등을 포함한 대책 수립	○ 제3차 UPR - 「국가보안법」 재검토를 통한 표현의 자유 보장 - 「국가보안법」, 「북한인권법」 등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법 폐지 - 「국가보안법」 제7조 개정 - 「국가보안법」임의 적용으로 부당 억류된 모든 정치범 석방	

제3차 NAP초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국제기구 권고	제2차 공청회 제시의견
권리	과제	소관부처			
범죄 피해자	가.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 지원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확대 ○ 범죄피해자지원시스템의 개선 및 보완 		
	나. 피해 배상과 국가 구조 강화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피해자구조금 현실화 및 지급요건 완화 ○ 이주민, 해외 장단기 거주 내국인 피해자, 인도적 체류자, 노인이 범죄피해자인 경우에 이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다. 형사절차 참여권리 확대 및 강화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뢰관계자 동석규정 의무화,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를 모든 범죄사건으로 확대 ○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인, 진술조력인제도 이행점검 및 개선 		
	라. 사생활의 평온 및 신변안전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지원체계 구축 -인터넷 신문 등 신종매체 보도에 의한 피해자 보도기준, 2차 피해 구제방법 및 절차규정 마련 		
	마. 범죄피해자 관련 정책추진 체계 정비 및 강화	법무부			

【 인격권 · 프라이버시, 언론출판집회결사 자유 】

제3차 NAP초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국제기구 권고	제2차 공청회 제시의견
권리	과제	소관부처			
인격권 및 프라이버시권	가. 보안관찰제도의 합리적 운영 적극 추진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의 통신데이터에 대한 광범위한 수집(정보통신기에 대한 해킹, 압수 수색 및 감청의 남용, 기지국수사 및 과도한 위치정보 수집)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 ○위치추적 및 신상공개 등의 제도 개선 - '가해제' 제도' 활성화나 최장 부착기간 조정 등 검토 ○위치추적 및 신상공개 등의 제도 개선 - 신상공개 대상 범죄 축소, 공개대상 정보 차별제도 ○녹음기기(스마트폰) 및 촬영 기기(CCTV)의 기술혁신과 가격하락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보편적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 ○빅데이터의 통합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사인에 의한 정보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정보주체의 통제미비, 내밀한 프라이버시 정보의 유출가능성 등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기술의 문제점에 대한 개인 정보보호법 점검 등 ○생체정보의 수집 처리 및 오남용 방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의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구체적 이행방안 필요 -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아이핀, 휴대전화 본인확인 시스템)도 가입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 필요 하므로 궁극적 대안 아님. 오히려 본인 인증책임을 국가가 사기업에 위험하게 위임하는 문제 있음 - 주민등록수집 법정주의에도 불구하고, 수집을 허용하는 예외규정이 너무 많음 ○ 특정범죄자 전자감독제도 인권침해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발찌는 보완처분이나 불안감, 수치심 등으로 인해 처벌 효과있음. 크기 축소를 비롯해 친인권적이면서도 부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성폭법 상 신상정보 등록에 따른 인권침해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중처벌, 연좌제 문제, 이를 위헌으로 본 현재 다수의견을 고려할 때 폐지나 본질적 개선 고려 ○ 녹음기기(스마트폰) 및 촬영기기(CCTV) 기술혁신에 따른 보편적 사생활 침해 관련 법적 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안에는 '법제 정비'의 구체적 내용이 없으며, 규제 범위 및 규제 대상 기기가 불분명 - 추후 예상되는 새로운 영상정보의 형태까지 고려한 법제도 마련이 필요 ○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기술의 문제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안 과제의 상세한 이행계획 보완 필요 - 기존의 입법을 단순히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에서의 창의적 접근이 필요함 ○ 생체정보의 수집 처리 및 오남용 방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안에 구체적 내용 보완 필요 - 생체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로 규정하여 보호 강화 필요 - '생체정보'에 대한 정의 규정 필요
	나.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의 정비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 특정범죄자 전자감독제도 운영에 따른 인권침해 최소화	법무부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신상정보 등록에 따른 인권침해 최소화	법무부			
	마. 녹음기기(스마트폰) 및 촬영 기기(CCTV)의 기술혁신과 가격하락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보편적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	행정안전부			
	바. 정보주체의 통제미비, 내밀한 프라이버시 정보의 유출가능성 등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기술의 문제점에 대한 개인 정보보호법 점검	행정안전부			
	사. 생체정보의 수집 처리 및 오남용 방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제3차 NAP초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국제기구 권고	제2차 공청회 제시의견
권리	과제	소관부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가. 고가치·고수요 데이터 민간제공 확대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회시위 진압방식의 신중한 운영 - 집회의 시간, 장소, 방식에 대한 과도한 제한 방지를 위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 ○ 실명제 인터넷 내용 규제 사이버 명예훼손 네트워크 관련 규제의 종합적 검토 ○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사표현의 자유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UP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현과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지속적 노력 - 인권옹호자 활동 보장을 위한 노력 - 활동가, 노조 등 인권단체 대표자 및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 조사 - 명예훼손의 비범죄화 - 「국가보안법」 재검토를 통한 표현의 자유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가치·고수요 데이터 민간제공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식별화 등 민간부문 데이터 가공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 ○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력한 개혁의지를 바탕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증거, 통신데이터의 남용과 디지털 도감청의 오용, 개인정보 유출의 등 중요 이슈 포함 필요
	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지속 추진	법제처 법무부			
	마. 집회 시위 관련 법령·제도의 합리적 운용	경찰청			
	사.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	방송통신위원회			

【 가족 · 여성 및 아동 · 청소년 】

제3차 NAP초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국제기구 권고	제2차 공청회 제시의견
권리	과제	소관부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바. 아동과 청소년 본인의 의견을 표시할 자유 보장	여성가족부	○ 아동과 청소년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의견을 표시할 자유 보장		
근로의 권리	라.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 제3차 UPR -젠더 주류화 및 성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강화 -청년과 여성의 노동시장 접근성 제고 -노동시장에서 여성참여 증진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국가적 노력 -여성대표성 제고 및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조치 -노동시장에서 남녀평등 증진 ○ 제4차 사회권규약위원회 최종권고 -(a) 여성의 경력단절, 시간제일자리설립 원인분석, (b) 보육을 위한 제도(유연근무제, 육아휴직 등) 개선 및 효과성 평가 (c)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 이행감독	○ 여성 노동 - 성별임금격차 해소와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화,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적정임금 확보를 통한 일자리 질 향상 필요
	하.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고용노동부	○ 여성근로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 고용친화적 공공부문 혁신 지속, 민간부문 혁신 지원 대책 마련		
	거. 아르바이트 청소년 등 사각지대 아동보호대책 마련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 청소년 미혼모, 아르바이트 청소년 등 사각지대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위한 대책		
문화·예술 등에 관한 권리	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사업 확대 및 개선	여성가족부			
가족 생활 등에 관한 권리	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 추진	보건복지부		○ 제3차 UPR -미혼모 차별 근절 등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시행 및 강화	○ 가족생활 등에 관한 권리 관련 - 가족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인권침해적 요소의 고찰이 이루어져야 함 ○ 미혼모부자가족,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차별해소 - 미혼모에 대한 인식 개선·인권보장, 지원강화 필요
	나.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여성가족부			
	다. 보육취약지역 위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건복지부			
	라.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 및 생활안정 지원	여성가족부			
여성	가.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가족부 법무부	○ E6-2 비자 소지 이주여성 및 십대 청소년의 성매매 근절 방안	○ 제3차 UPR -사회적, 경제적 및 정치적 분야에서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여성 차별 금지 및 성평등 증진을 위한 조치 지속 -여성,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속적 조치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을 위한 노력 -성별에 기반한 폭력 방지와 이주민에 대한 가정폭력 처벌을 위한 포괄적 전략 채택 -가정폭력 인식 제고 -성별에 기반한 폭력, 가정폭력, 부부강간 방지를 위한 포괄적 법안·전략 수립을 위한 조치 취할 것	○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관련 -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와 인신매매 방지법 제정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필요 ○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여성폭력예방 - 대중매체·온라인 상의 여성혐오 규제 필요 ○ 성희롱 예방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업주 책임 강화, 피해자 보호조치 마련 필요
	나.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가족부 법무부			
	다. 성희롱 예방	여성가족부	○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제3차 NAP초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국제기구 권고	제2차 공청회 제시의견
권리	과제	소관부처			
	라. 성인지 정책 추진 기반 확립	여성가족부	○성 주류화 및 여성 대표성 확대 -성인지예산, 성별영향 분석 등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자 교육 강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을 통한 가정폭력 근절 노력 -여성·아동 인신매매 및 성매매 피해자의 사법적 지원과 보호 보장 -미혼모 차별 근절 등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시행 및 강화 -공공·민간 영역에서 관리직 여성 비율 높이기 위한 조치 -여성대표성 제고 및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조치 -가정·성폭력 및 인신매매 등의 희생자가 된 외국인 여성에 대한 사법시스템 접근권 강화 -여성 국회의원 비율 확대를 위한 할당제 수립	○모·부성권 강화 -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모성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 - 부성권 보장을 위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필요 ○여성대표성 확대 관련 - 국회의원 선출직과 비례대표 비율 2:1, 지역구 30% 여성 공천 의무화 및 강제이행 - 국회 비례대표 후보자 50% 여성할당과 교호순번제 강제이행조치 - 지방자치단체장 여성후보 공천 확대 및 지방의회 할당제 확대 - 헌법 개정 시 동수제 조항 삽입 및 동수내각 실현 - 공공분야(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고위공무원, 공기업과 공공기관 고위 공직자) 30% 여성 할당제 실시 - 국·공립대 여성 교수 및 여성 교장·교감 임용 목표제를 적극적 추진 ○미혼모부자가족,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차별 해소 - 미혼모에 대한 인식 개선·인권보장, 지원강화 필요
	마.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및 권익 향상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아. 여성폭력 예방	여성가족부 법무부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여성폭력피해자(장래여성, 결혼이주여성, 이주여성노동자)지원강화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문화적 인식 제고		
	자. 모·부성권 강화	여성가족부	○모·부성권 강화 -출산 및 육아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남성 육아휴직 등을 통한 부성권 보장		
	차. 성 주류화 및 여성 대표성 확대	여성가족부	○성 주류화 및 여성 대표성 확대 -국회의원, 중앙·지자체 여성 관리직 공무원 목표제 도입		
	카. 미혼모부자가족,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차별 해소	여성가족부	○미혼모부자가족, 한부모가족, 미혼모 등에 대한 차별 해소		
아동·청소년	가. 아동·청소년 동아리 활동 및 창의적 체험 활동 활성화	여성가족부		○제3차 UPR -아동권리 강화 및 아동권리 교과과정 통합 노력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과 지원 제공을 위한 법적 조치 -모든 환경에서의 체벌 금지 -아동성폭력 보호대책 강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제4차 사회권규약위원회 최종권고 -아동학대 (a) 신고의무자 확대(일반인 등), (b) 피해자와 가해자 격리를 위한 법규·인프라 마련, (c) 피해자 위한 가혹형 대체물품 추진	○생명권 관련 - 아동의 생애적 특성을 고려해 생명권에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 ○신체의 자유 관련 - 아동의 의료·복지 시설에 있어서 '아동 최선이익의 법칙'이 준수되도록 해야 함 ○거주이전의 자유 관련 - 민법상의 거소지정권과 아동복지법 상 아동의 복지시설에의 보호조치가 헌법·아동권리협약의 기준에 타당한지 검토 필요 ○근로의 권리 관련 - 연령, 환경, 임금수준 등에 대한 규범 확립과 담장 부처 확인·부처 간 네트워크가 필요 ○아동의 특수성 관련 - 아동기는 보편적이라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정책에서 고려하고, 특히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이 필요 ○기타 제안 - 아동권은 다른 인권분야에 비해 시민사회의 활동도 부족하고 권리 보호도
	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여성가족부			
	바.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	여성가족부			
	사.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가정, 학교 등에서의 각종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학대, 성범죄 등 피해아동에 대한 언론보도로 인한 사생활 침해방지 방안		
	차. 청소년 특성에 맞는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 지속	여성가족부	○성매매에 노출된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위한 대책		
	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강화	여성가족부			
	타. 위기청소년 비행예방기능 강화	법무부			
	파. 인터넷중독 청소년을 위한 치료·재활 체계 구축	여성가족부			
	더. 아동유기, 불법입양(아동매매) 등 대책 마련	통계청 법무부	○아동 출생 사망에 대한 정확한 통계구축 ○아동유기, 불법입양(아동매매), 학대, 건강보험 미가입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출생신고제도 개선		

제3차 NAP초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국제기구 권고	제2차 공청회 제시의견
권리	과제	소관부처			
	머. 아동양육과 보호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책임 강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아동양육과 보호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책임 강화		<p>낮은 수준이므로 최소한의 국제인권기준이라도 잘 담아야 함</p> <p>- 국제 기준과 국내의 제도적 현실 사이의 차이(GAP) 도출·현황 파악이 필요</p>
	버. 공보육과 공교육 강화, 관련 예산 확대	보건복지부	○ 공보육과 공교육 강화, 관련 예산 확대		
	서. 가출 청소년 인권보호 위한 대책 마련	여성가족부	○ 피학대아동, 가정 밖 청소년 등 취약지대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 위한 인프라 구축예산 확보		
교육을 받을 권리	카. 학교 중도탈락자에 대한 정규학교 외 다양한 교육기회 부여	여성가족부	○ 정규학교 이외의 아동·청소년 및 중도탈락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보장		

【 교육부 소관 분야 】

제3차 NAP초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국제기구 권고	제2차 공청회 제시의견
권리	과제	소관부처			
신체의 자유	타. 학교 체벌의 금지	교육부			
교육을 받을 권리	가. 무상교육의 점진적 확대	교육부	○ 교육이 계층이동의 수단인 '희망의 사다리'로서 사회 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득별, 지역별 교육 격차의 해소	○ 제3차 UPR -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확대 - 인권교육 및 인권의식 증진 ○ 제4차 사회권규약위원회 최종권고 - 양질의 교육에 대한 취약계층의 평등한 접근 위한 조치로, (a) 학교교육 강화, (b) 입시 제도 개정 (c) 야간교습·과외활동 규제에 대한 영향 모니터링, (d) 교육의 평등적 기능 강화 (64)	○ 아동·학생 교육권 보장 필요 - 아동청소년 인권법, 차별금지법, 인권교육법 제정 - 체벌금지, 교육과정 중의 사건의 학생기록부 기재 개선, 정치적 권리 보장 ○ 교육권 보장의 생태계 개선 필요 - 교원의 정치적 자유와 교육 정책 수립의 참여 보장,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성에 따른 교육의 국가주의 배제 방안, 민주시민교육 체계, 학교민주주의의 체계 및 학교민주주의의 체계 구축, 사립학교 비리와 부정부패 방지책 마련, 지방교육자치의 보장 ○ 장애인 교육권 보장 -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및 적정 수준의 특수학교 설치 • 특수 교원의 법정 정원을 확보 - 통합학급 설치 및 지원확대 • 통합교육 환경의 토대 확충 • 일반학교 내 통합학급 설치 의무화 - 장애학생지원센터 내실화 - 장애인 고등교육 학자금 지원 강화 • 석·박사 과정의 장애인을 위한 장학금 지원 확대방안과 함께 생활지원 대책 마련 •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학생의 법적인무화 • 대학 내 장애인 편의시설 100% 확보 • 장애인 교수·학습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확보 • 장애학생 도우미 인력 확보 및 전문성 강화 • 장애인 고용정책에서 석·박사 이상의 장애인 고급인력에 대한 고용지원 및 정책
	나. 성취평가제 추진	교육부			
	다.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제 구축 및 운영	교육부			
	라.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비·교육급여 지원	교육부	○ 교육이 계층이동의 수단인 '희망의 사다리'로서 사회 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득별, 지역별 교육 격차의 해소		
	마. 장애인의 교육보장	교육부			
	바. 맞춤형 다문화교육 지원	교육부			
	사. 온라인 무료 영어학습 환경 확대·강화	교육부	○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의 균형적 발전 방안		
	아.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 및 교육환경 보호 강화	교육부			
	자.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강화	교육부			
	차.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의 균형적 발전 추진	교육부			
	카. 학교 중도탈락자에 대한 정규학교 외 다양한 교육기회부여	교육부			
		(교육부)	○ 학교교육의 안정된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개편과 내용을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하여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근로의 권리	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취업 지원	교육부			○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취업지원 관련 의견 - 취업지원에 더불어, 실습생 보호대책이 필요
	거. 아르바이트 청소년 등 사각지대 아동보호대책 마련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건강·보건, 환경권	아.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성 확보	교육부			
	자. 학교 성교육 내실화 방안 수립·추진	교육부			

제3차 NAP초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국제기구 권고	제2차 공청회 제시의견
권리	과제	소관부처			
	차. 흡연·음주 예방교육 강화	교육부			
여성	가.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교육부	○ E6-2 비자 소지 이주여성 및 십대 청소년의 성매매 근절 방안		
아동, 청소년	가. 아동·청소년 동아리 활동 및 창의적 체험 활동 활성화	교육부	○ 경쟁적 교육제도 개선을 통한 아동의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 및 놀 권리 보장 ○ 극심한 입시경쟁에 따른 학업중압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나.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교육부			
	라. 지식 위주 경쟁적 교육 개선을 통한 학생존중 교육풍토 조성	교육부			
	마. Wee 프로젝트 기능 강화	교육부			
	바.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	교육부			
	하. 학교주변 안전지역 통합운영방안 마련	교육부			
	거.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교육부			
	너. 학생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교육부	○ 아동의 기본적 건강권 보장, 우울증과 자살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대책 확대		
버. 공보육과 공교육 강화, 관련 예산 확대	교육부	○ 공보육과 공교육 강화, 관련 예산 확대			
장애인	라. 장애인 교육권 보장	교육부	○ 장애인 교육권 보장 -통합교육, 개별화교육을 통한 장애아동의 교육권 증진 -보조기구, 보조인력, 적절한 교육방법 등 장애아동의 특성에 맞는 정당한 편의 제공 -특수교육교원의 증원과 법정 정원 확보 -일반학교 교사와 직원 그 밖의 교직원, 교육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훈련 강화		
외국인 이주민	차. 이민배경아동의 교육권, 건강권 보장	교육부	○ 이주노동자 및 무국적 자녀의 출생등록, 보육권, 교육권, 건강권 보장		
재외 동포	바. 방문취업 해외동포 자녀에 대한 교육권 보장	교육부	○ 방문취업동포에 대한 취업지원 및 관리정책 개선 -방문취업 해외동포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교육권 보장		
병력자, 성적 소수자	나. 사회적 소수자 인권교육 지속	경찰청 (국방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 학교 교직원, 공무원(경찰, 군대 포함) 및 보건의로 종사자에 대하여 사회적 소수자 인권교육 지속		
북한 이탈 주민	라.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 적응력 강화	교육부 통일부			

제3차 NAP초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국제기구 권고	제2차 공청회 제시의견
권리	과제	소관부처			
인권 보장	나. 학교 인권교육	교육부			
	(1) 인권 친화적 교과서 개발 및 관리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심의 시 인 권요소 반영과 모니터링 강화 ○ 학교현장에 활용 가능한 인권교육 교재 (교과교육과정, 창의적체험활동) 개발 보급 		
	(2) 교원 대상 인권교육 지속 추진	교육부	○ 교원 직무연수에 인권교육 포함, 학부모 대상 인권교육		
	(3) 일반학교의 장애인권 및 장애 이해교육 강화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교육권 보장 - 일반학교 교사와 직원, 그 밖의 교직원, 교육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훈련 강화 		
	(4) 대학 인권교육 활성화	교육부	○ 대학의 인권교과목 개설 확대, 학생 및 교직원 인권 교육 강화 및 인권센터 건립 및 활성화를 통한 인 권친화적 대학문화 조성		
	(5)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과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 마련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권고’의 지속적 이행과 국가인권위원회 - 각 시도교육청 - 인권단체 간 협력 지원체계 구축 		
국제 인권 규범 이행	라.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교육 강화	교육부	○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교육 강화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교육부)	○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과 차별금지		

【 고용노동부 】

제3차 NAP초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국제기구 권고	제2차 공청회 제시의견
권리	과제	소관부처			
근로의 권리	가. 「비정규직 종합대책」 지속 추진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UP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과 여성의 노동시장 접근성 제고 - 노동권의 지속적인 보장 -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노력 - 이주노동자 보호 및 착취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조치 - 이주노동자 권리 증진 및 노동 감독 강화 - 고용허가제 개정으로 횡수 제한 없는 사업장 변경 보장 ○ 제4차 사회권규약위원회 최종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관계법이 하도급·파견 노동자 등에도 모두 적용되도록 보장, 비정규직 근로 갱신 보장,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침해 근로감독 강화 - 근로기준법의 노동권 보장성 강화, 농수산업·가사 사용인 등의 노동권 보장 - 적절한 최저임금 보장 및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감독 강화 - 사업장변경제한 폐지, 농어업부문 이주노동자 사회권 보장강화(학대 조사, 가해자 처벌 등 포함) 	<p>▶ 비정규직 종합대책 관련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없는 계획은 거짓·공상임 ○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제 사유제한 도입 등 ○ 비정규직 차별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시정 신청 주체 확대* 필요 *노동조합 등에 차별시정 신청권한 부여 ○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차별시정 지도·감독 강화 방안 - 근로감독관 수의 확충, 업무량 경감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이 먼저 강구될 필요 <p>▶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 관련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를 특수고용노동자로 쓸 것 ○ 그간의 입법 경과를 봤을 때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안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으므로, 행정권 발동 필요 <p>▶ 외국인 근로자 관련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허가제 폐지 및 노동허가제 도입, 외국인 강제추방제도 재검토, 법무부 주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재검토 <p>▶ 기타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적 용어의 사용 (근로가 아닌 '노동' 등) ○ 최소한 결사의 자유 ILO협약 비준, 노동자 단결권 확대보장, 노사 자율교섭권 보장, 단체행동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 담겨야
	나.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 마련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대책 마련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주요 사회보험 가입 및 적용 확대 		
	다. 장애인 고용지원 제도 개선	고용노동부			
	바.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 모니터링 지속 실시	고용노동부			
	사.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확대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 방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방안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 방안 -비공식부분 가사노동 근로기준법 적용 방안 마련 및 보호입법 -ILO 가사노동자협약 비준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험 적용범위 확대 -현행 법령상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근로자(일정금액 이하의 소규모 공사 근로자, 가사 사용인,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종사 근로자)와 해외파견 근로자 등에 대한 보험 적용 방안 마련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감독관 확충 및 실질적 근로감독 실현 		

제3차 NAP초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국제기구 권고	제2차 공청회 제시의견
권리	과제	소관부처			
	아. 농림업,수산업,축산업 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 적용 검토	고용노동부			
	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보호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저임금제도 실효성 확보 -최저임금액 향상을 위한 단계별 목표치 수립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한 검토 및 개선 		
	차.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증진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증진 방안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용자 책임 및 근로자 참여 강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한 사용자, 근로자 교육 강화 -사업장의 산업재해 미신고에 대한 행정감독 및 제재 -감정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 -산업재해보험 승인심사위원회 전문성 강화, 업무상 재해 입증책임 분담 등 제도개선 		
	카.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부당한 근로자 감시, 개인정보보호 침해 근로환경 개선		
		(고용노동부)	○간접고용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차별적 처우 개선		
	타.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기준 강화 및 원청사업주 책임강화	고용노동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기준 강화 및 원청사업주의 책임강화		
	파.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 촉진 대책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 촉진 대책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의 명확화 -경영상 해고 요건 강화 -사용자의 부당해고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복원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맞춤형 고용촉진정책 추진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 개정 검토(상시지속 근로의 기준 완화, 전환예외사유 축소, 간접고용근로자 포함 등)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친화적 공공부문 혁신 지속, 민간부문 혁신 지원대책 마련 -고용형태공시제 단계적 확대 		
	하.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근로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거. 아르바이트 청소년 등 사각지대 아동보호대책 마련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청소년 미혼모, 아르바이트 청소년 등 사각지대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위한 대책		
	너. 노동자 휴가지원제 도입	문화체육관광부			

제3차 NAP초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국제기구 권고	제2차 공청회 제시의견
권리	과제	소관부처			
근로 3권	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3권 보장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3권 실질적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단속 강화 및 엄정한 법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차 사회권규약위원회 최종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유지업무 범위 엄격제한, 정부의 파업권 침해 금지, 파업 참가 노동자에 대한 보복조치 조사 - 단체교섭 약화를 위한 복수노조 허용행위 규제, 노조가입권 보장 위한 법개정, ILO 핵심협약 87(결사,단결), 98(단결,단체교섭)호 비준 	
	나. 대학교원의 단결권 보장 방안 마련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체행동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쟁의행위의 정당성 범위 확대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문제점 개선 -조정전치, 중재재정, 긴급조정제도 등의 공정한 운영 방안 마련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의 단결권 확대를 위한 법제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과 교원의 근로3권 제한의 완화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섭창구 단일화에 따른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 침해 실태 파악 및 개선안 		
	다. 노사정 간 대화를 통한 노동존중 사회 실현	고용노동부			
인간 다운 생활을 할 권리	나.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빈곤층 자활, 빈곤예방 및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한 사회부조 및 실업부조제도 확충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 ○다양한 근로형태의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출퇴근재해 보호위한 제도 개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고용보험 적용제의 제도 축소 		
여성	사. 여성근로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적정임금 확보를 통한 일 자리의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UP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시장에서 여성참여 증진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국가적 노력 - 공공·민간 영역에서 관리직 여성 비율 높이기 위한 조치 - 여성대표성 제고 및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조치 - 노동시장에서 남녀평등 증진 	<p>▶ 여성 노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임금격차 해소와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화,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적정임금 확보를 통한 일자리 질 향상 필요 <p>▶ 모·부성권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모성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주여성노동자의 인권침해 실태 파악 및 지원체계 마련 		
	자. 모·부성권 강화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부성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남성 육아휴직 등을 통한 부성권 보장 		

제3차 NAP초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국제기구 권고	제2차 공청회 제시의견
권리	과제	소관부처			
장애인	나. 장애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	○장애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문에서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 및 이행		▶ 여성장애인 ○ 여성장애인 지원법 제정 및 여성장애인 정책 전달 추진체계 등 구축 ○ 여성장애인 고용확대 방안 마련 ○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가사지원제도 도입 -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산전 교육 지원 - 다양한 상담지원체계가 구축 필요 - 여성장애인 친화적 시설과 의료진의 장애 감수성, 여성장애인의 몸에 대한 이해가 있는 '여성장애인 전문 지정 산부인과'가 필요 - 여성장애인의 심리 및 장애유형을 고려한 전문인력(수화통역사 등)의 배치 필요 - 산후조리원의 장애인 접근성 확보, 산후조리를 도울 수 있는 홈 헬퍼 서비스, 육아도우미 전국 확대 ▶ 장애인 교육권 보장 - 장애인 고용정책에서 석박사 이상의 장애인 고급인력에 대한 고용지원 및 정책 ▶ 장애인 노동권 보장 ○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 강화 - 안정적 고용 유지를 위한 서비스 기능 강화 • 직업재활 기관,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관련 단체 등의 취업 후 적응지원 서비스 강화 • 고용 관련 장애인 동료 상담가 양성 및 지원 - 중증장애인 근로자 지원 인력 확대 • 중증장애인의 지속적 근로지원을 위한 인력(근로지원인, 직무보조인 등) 필수 배치 및 확대 • 근로지원인 확대 및 처우 개선 • 전문자격증 소지 근로지원인에 대한 차등 처우 - 중증장애인 해고 보호 제도 도입 • 독일의 해고 보호 제도 등을 벤치마킹 •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부당해고 예방을 위해 해고 심의 절차 및 기준 마련 • 지원체계 등 법적 근거 마련 및 제도화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및 지원 - 5인 미만 사업장 등 영세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일부 적용 제외를 폐지하고 장애인 고용 시 추가 지원을 할 필요
	카. 장애인 노동권 보장	고용노동부	○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 근로능력 판정기준 마련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근로지원 제도 확대 -의무고용 할당제 확대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재 조치 강화		

제3차 NAP초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국제기구 권고	제2차 공청회 제시의견
권리	과제	소관부처			
노인	마. 다양한 단체·문화 활동 참여, 사회공헌 활동 접근성 강화	고용노동부	◦다양한 단체나 문화 활동 참여, 사회공헌 활동 접근성 강화		
	바. 노인 소득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고용노동부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개선과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다양한 취업기회 보장		
외국인 이주민	라. 이주 노동자 인권침해 예방 및 인 권보장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방지대책 강화, 임금체불 보증보험 보장금 액 확대 및 사업주 교육, 출국만기보험 귀국 후 수 령제도의 문제점 개선 등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최 소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제한 개선 및 산재보험 가 입 업체에만 외국인력을 배치하는 등 안전강화, 내국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주거 및 식 대 징수 기준 마련 ◦농축산업, 어업, 임업, 건설업, 예술흥행 이주노동 자의 인권 침해 예방 및 인권보장		
재외 동포	가. 방문취업 동포에 대한 취업 지원·관 리 지속	고용노동부	◦방문취업동포에 대한 취업지원 및 관리정책 개선 -구직 신청 및 알선 기관의 다양화(고용허가제, 내국인 일 자리 보호와 조화) -재외동포에 대한 방문취업 확대		
북한 이탈 주민	나.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 통일부			
인권 교육	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대상 인권 교육	고용노동부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국제 인권 규범의 이행	가.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추가 가입·비준	고용노동부	◦결사의 자유 관련 국제협약 비준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에 대한 구체적 비준계획 수립 및 비준		

【 장애인 】

제3차 NAP초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국제기구 권고	제2차 공청회 제시의견
관리	과제	소관부처			
신체의 자유	카. 보호시설에서 인권보호	보건복지부	○ 보호시설(정신보건시설, 사회복지시설)내 인권침해 방지	○ 제3차 UPR -정신병원 입원 장애인에 대한 부당대우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메커니즘 수립	○ 시설장애인의 인권보호 -시설장애인 인권실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 • 특수학교,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등 이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대안 마련이 필요
장애인	가. 장애아동에 대한 적절한 복지지원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 제3차 UPR -장애인 건강관리와 복지서비스 지원 확대 노력 -정신병원 강제입원 폐지 및 정신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방지 -노인·장애인을 위한 연금 계획 등 모범 사례 창출 -정신질환자 복지 개선과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	○ 생명권 -장애인 자살 • 장애인 자살 통계 구축 및 관련 자료 연구 •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통한 자살 예방 • 혼자 거주하는 장애인을 정기적으로 방문 혹은 연락하는 서비스를 실시 • 직업 활동 및 사회생활을 통한 자살 예방 • 제도 개선을 통한 자살 예방 - 모자보건법 낙태의 범위 재규정 • 모자보건법 제 14조는 장애 태아의 낙태를 정당화하는 내용으므로 삭제해야함 ○ 장애아동에 대한 적절한 복지지원 서비스 제공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및 질 관리체계 구축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대상자 및 지원체계 확대 • 발달재활서비스 질 관리체계 구축 - 장애인가족지원 강화 •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 찾아가는 장애인부모동료상담지원 • 장애인가족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정 및 지원 • 장애인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 장애아동 보조기기 지원 확대 • 장애아동 보조기기에 대한 사용연한 폐지 • 사용 중 사고나 고장으로 인한 재신청 허용 • 중앙정부 차원의 유지관리비 지원 • 자신의 몸에 맞게 튜닝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 ○ 여성장애인 - 여성장애인 지원법 제정 및 여성장애인 정책 전담 추진체계 등 구축 - 여성장애인 고용확대 방안 마련 -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가사지원제도 도입 •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산전 교육 지원 • 다양한 상담지원체계가 구축 필요 • 여성장애인 친화적 시설과 의료진의 장애 감수성, 여성장애인의 몸에 대한 이해가 있는 '여성장애인 전문 지정 산부인과' 필요
	나. 장애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 장애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 -장애인 복지정책에서의 성인지적 관점 고려, 관련 법령 정비, 예산 확충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 지원서비스 확대 -장애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현실을 분석할 수 있도록, 장애관련통계에서 성별분리통계 구축		
	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확대 및 급여 내실화	보건복지부	○ 활동지원제도의 활동지원 대상 확대		
	마. 장애인 접근권 보장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중앙선관위)	○ 장애인 접근권 보장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버스, 마을버스 등에도 저상버스 도입확대 및 활성화 -인터넷에서 쉬운 언어, 음성지원 제공 등 정보접근권 강화 -선거용 보조기구 개발 및 보급, 투표소 편의제공 확대, 장애인 대상 홍보 강화 등 장애유형별 투표권 보장 조치 마련 -개인사업장의 편의시설 설치 및 편의제공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유니버설 디자인 확대 방안 강구 ○ 사법예의 접근 보장 -공정한 재판, 적법절차 보장을 위한 편의제공 강화 -소송절차에서 진술조력인, 신뢰관계자 동석, 보조인, 특별대리인, 국선변호인, 통역인, 소송구조 제도 등 적극 활용		
	바. 장애인 사회통합 강화	보건복지부	○ 장애인 사회통합 강화 및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 -탈시설화, 지역사회 자립생활 및 통합 지원정책 강화 -장애인등급제 폐지, 장애 특성·서비스 욕구·환경에 기초한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장애특성을 고려한 최저주거기준 마련 및 주거지원 확대 -장애인의 긍정적인 이미지 강화를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 장애인 권리에 관한 홍보와 교육 확대		

제3차 NAP초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국제기구 권고	제2차 공청회 제시의견
권리	과제	소관부처			
	사. 시설장애인의 인권보호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장애인의 인권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장애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 자기결정권 존중 방안 마련 -시설장애인의 인권실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 ○ 정신장애인의 권리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병원의 강제입원 및 장기입원제도의 실질적 개선 ○ 사회적 시설 수용자들의 '이전의 자유' 보호,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장애인의 심리 및 장애유형을 고려한 전문인력(수화통역사 등)의 배치 필요 • 산후조리원의 장애인 접근성 확보, 산후조리를 도울 수 있는 홈 헬퍼 서비스, 육아도우미 전국 확대 ○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확대 및 급여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조사 개선 및 65세 이상 장애인 선택권 보장 • 장애유형 및 특성을 반영한 인정조사표 개선 • 장애유형 및 특성을 반영한 인정조사표 개발 및 수급자격 갱신제도 개선 • 65세 이후 장애 특성과 환경 등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선택권 보장 -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 등 권리보장 • 활동지원 등급제한 폐지 및 최종증장애인 에 대해 24시간 활동지원을 보장 • 급여 이용범위와 바우처 생성주기를 확대 하고, 단가 차등화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 장애유형을 고려한 활동보조급여의 다양화 • 활동보조서비스 품질 보장 및 최저임금액 보장 ○ 장애인 사회통합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자립 및 지역사회활동 참여 지원 • 탈시설 자립정착금 제도화 •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주택 공급 • 탈시설-자립생활 전환 지원체계 마련 ○ 시설장애인의 인권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병원의 강제입원 및 장기입원제도 개선 • 퇴원 전 사회복귀 지원 시스템 강화 • 사회복귀 초기 지원 및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 장애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재난 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시 장애인 위기상황 대처 방안마련 • 강사육성 교육 • 장애인 등 재난취약자 행동매뉴얼 개발 • 재난 취약계층 대치 기구 개발 및 보급 • 안전체험관 운영 ○ 장애인 건강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권 보장 • 지자체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실효적 세부방안 수립 및 시행, 모니터링
	아. 장애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재난 대책 마련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재난 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예방과 대응 정책 마련 		
	자. 장애인 건강권 보장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건강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기관의 장애인 진료를 위한 특수장비 및 장애유형별 의료장비 구입 시 정부 재정지원 		
	차. 장애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대책 마련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연금의 급여수준 상향 조정 -성인 장애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 		
	파. 학대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보건복지부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대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특히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폭력 및 착취 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 당사자 교육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 내실화, 「장애인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 구제, 보호, 지원 강화 		

제3차 NAP초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국제기구 권고	제2차 공청회 제시의견
권리	과제	소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시행 - 장애인의 본인부담금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장장애인 및 만성신부전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 척수장애 등에 대한 세부 지원방안 마련 ○ 장애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연계 장애인소득 지원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근로장려세제 체계 별도 마련 및 적용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등) 개선 •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의료 및 보조기기 지원급여 확대 •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증장애인 근로소득 공제율 상향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장애인의 근로소득 공제 확대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 중증장애인 국민연금 특례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노령연금 조기수령 제도 도입 •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특례제도 도입 ○ 학대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학대 지원제도 마련 • 장애인학대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 사회복지 및 보건·건강 】

제3차 NAP초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국제기구 권고	제2차 공청회 제시의견
권리	과제	소관부처			
생명권	나. 자살 예방 체계 강화	보건복지부	○ 자살의 근본적 원인연구에 대한 지원과 자살예방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발, 관련교육의 강화	○ 제4차 사회권규약위원회 최종권고 - 자살 원인(성소수자 차별·혐오표현, 노인빈곤 등) 규명 및 예방 노력 강화	
	다. 생명존중 문화 확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 환자안전법의 조기 정착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정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합리적 개선	보건복지부	○ 기초보장제도 선정·급여기준인 중위소득의 일정 %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최저생계비의 주기적인 계측 ○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의 소득환산율 개선	○ 제4차 사회권규약위원회 최종권고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사회보장 금액증대 - 보장성 강화 및 취약계층 보호, (비)전염성 질병 예방도 보장,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보편적 보장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의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제도의 개·폐지를 포함해야 함 - 주거권과 관련하여, 형식적인 면에서 독자적인 항목으로 편성하고 내용적으로도 취약계층의 주거 접근권 측면을 반영해야 - 사회보험·자활과 관련하여, 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안들의 충분한 반영이 필요하며, 근로 유인을 위한 자활사업을 독립적으로 편성하고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기타 제안 - 빈곤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공공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해야 - 새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이 누락되어 있어 보이므로 보완이 필요해 보임
	나.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보건복지부	○ 근로빈곤층 자활, 빈곤예방 및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한 사회부조 및 실업부조제도 확충		
		(보건복지부)	○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주요 사회보험 가입 및 적용 확대		
		(보건복지부)	○ 치매 등 주요 질환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요건 중 연령기준 완화		
		(보건복지부)	○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기초보장급여 제공 확대		
		(보건복지부)	○ 긴급복지지원제도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사회보장 강화		
건강, 보건 및 환경권	가. 비급여 관리체계 마련	보건복지부	○ 질환중심 보다 비용중심의 보장 검토 ○ 비급여 관리체계 마련, 비급여 정보 공개 및 표준화를 통한 합리적 가격 결정 유도	○ 제3차 UPR - 취약계층 건강권 접근성 증진 ○ 제4차 사회권규약위원회 최종권고 - 정신보건서비스의 접근성 확대, 지역사회기반 진료와 예산 확충	○ 건강·보건 및 환경권에 대한 의견 - 건강권과 관련하여, 문재인 케어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포함시킬 것
	나. 지역 간 균형있는 공공보건의료 제공체계 마련	보건복지부	○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공공성 강화 ○ 보건의료자원의 지역간 균형 개발		
	다. 공공보건의료 지원기반 확충 및 서비스 제고	보건복지부			
	라.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마.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수준 평가지표 개발	보건복지부	○ 환자 안전사고 발생시 보고체계 의무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수준 평가 및 공개		
	러. 진료비 정보 공개 확대	보건복지부	○ 환자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확대를 위한 진료비 공개 확대		
	머. 필수·고가 의약품 접근 가능성 제고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을 고려하여 필수·고가 의약품 접근 가능성 제고		
		(보건복지부)	○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본인부담 상한제도 개선		
		(보건복지부)	○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일차의료기관 기능 회복, 지역의료 서비스 연계		

【 식품 · 의약품 및 제품안전성, 안전권 】

제3차 NAP초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국제기구 권고	제2차 공청회 제시의견
권리	과제	소관부처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수질기준 설정.관리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을 확대하고, 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등 관리체계를 점검하여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차 사회권규약위원회 최종권고 - <식수권>: 수자원의 질 보장 및 안전 	
	마. 농축산물 안전성 강화	농림수산물식품부			
	바. 수산물 안전성 강화	해양수산부			
	사. 급식관리 공공성 제고 및 먹거리 안전 국가 책임제 실시	식약처			
	파.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환경부			
	하. 화학물질 유해정보 확보.공개	환경부			
건강보전 및 환경권	바. 허가받은 치료제가 없는 희귀 질환 등에 대한 치료 기회 확대	식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건강을 고려하여 필수·고가 의약품 접근 가능성 제고 		
	카. 마약류 유통관리체계 강화 및 오남용 방지	식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약류 유통관리체계 마련, 오남용 모니터링 		
	버. 인체위해물질 및 제품에 대한 위해성 통합평가 및 안전강화	식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을 확대하고, 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등 관리체계를 점검하여 제도 개선 		
안전할 권리	국정과제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계 구축	행안부			
	국정과제 56.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강화	행안부			

【 문화 · 예술 및 과학 】

제3차 NAP 초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국제기구 권고	제2차 공청회 제시의견
권리	과제	소관부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다. 소외계층 방송 접근권 보장	방송통신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ICT 환경 변화에 따른 웹, 앱 접근성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UI/UX가 창의성이 보장되어야 할 영역에서 국가가 획일화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 필요
	라. ICT 환경 변화에 따른 웹, 앱 접근성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예술에 관한 권리	가. 지역문화기반 구축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교육, 특히 미디어를 적절히 수용하고 활용하는 미디어 교육 실시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될 수 있는 정책 문화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차 사회권규약위원회 최종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다문화 가치 증진, (b) 문화다양성 확산 조치 모니터링 	
	나.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			
	마. 노인을 위한 생산적 여가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및 참여여건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바. 예술인 창작기반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사.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아.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될 수 있는 정책 실시	문화체육관광부			
	자. 지역 간 문화 균형 발전	문화체육관광부			
	차.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문화체육관광부			
여성	바. 여성문화예술인 창작 활동 기반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아. 학생 선수의 인권 보호 증진	문화체육관광부			
아동·청소년	자. 청소년 연예인의 인권 보호	문화체육관광부			
	타. 장애인의 문화권 증진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의 문화권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스마트폰, IPTV상의 문화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조치 - 관광교통수단 및 편의시설 확충, 호텔 및 식당 등 공중이용시설물에서의 편의제공 등 문화관광지への 접근성 강화 조치 - 장애인의 여행·여가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문화권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예술인 창작발표 전용 공간 및 창작지원 - 장애인 전용 공연장, 창작센터 등 마련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전문화 및 장애인 문화예술 전문양성기관 설립 - 장애인 문화예술 전문양성기관 설립
외국인 이주민	자. 자국민 문화 표현 및 교류기회 확대를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주민의 문화 주체성을 전제한 지역주민들과의 교류 활성화 및 문화 지원 사업 확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차 UP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자와 이주민 간의 문화교류 장려를 위한 노력 	

【 환경권 】

제3차 NAP초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국제기구 권고	제2차 공청회 제시의견
권리	과제	소관부처			
환경권	타.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의 체계적 추진	환경부		○ 제4차 사회권규약위원회 최종권고 - 수자원의 질 보장 및 안전	○ 건강·보건 및 환경권에 대한 의견 - 탈핵 부분도 반영할 것
	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추진	환경부			
	하. 환경보건 기반 구축	환경부			
	거. 주요 오염원에 대한 배출 저감대책 추진	환경부			
	너.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 대응책 추진	환경부			
	더. 생활소음에 대한 대책 마련	환경부			
		(환경부)	○ 환경권 관련 집단소송제도 등 사회적 약자의 환경권 향상을 위한 정책		
		(환경부)	○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약의 가입 및 이행		
		(환경부)	○ 환경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며 미래세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로 인식하게 하는 환경교육 강화		

【 국토교통부(주거권 및 이동권)】

제3차 NAP초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국제기구 권고	제2차 공청회 제시의견
권리	과제	소관부처			
거주·이전의 자유	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	국토교통부			
	나.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해양수산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아. 주거권에 대한 인식 정립을 위한 교육과 홍보	국토교통부	◦주거권에 대한 인식·정립을 위한 교육과 홍보	◦제4차 사회권규약위원회 최종권고 - (a) 홈리스 원인 파악과 장기대책 마련, (b) 사회주택 (social housing) 등 적절한 주거 이용 보장, (c) 주거비 상승 규제 및 주택임차인 갱신권 보장, (d) 협의·보상 등 퇴거자 보호법제 마련	
	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속 추진 및 법령 정비	국토교통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		
	차. 임대주택의 공급정책의 지속적 추진	국토교통부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지속적 추진		
	카. 주거안정을 위한 저리의 전월세용자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			
	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지속 확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주거기준 정립		
장애인	바. 장애인 사회통합 강화	국토교통부	◦택지개발 사업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시 주민의 의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절차 강화 ◦강제철거 시 거주민의 인권보호에 유의		
			◦장애인 사회통합 강화 및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 -장애특성을 고려한 최저주거기준 마련 및 주거지원 확대		

【 양심적 병역거부 · 군인권 】

제3차 NAP초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국제기구 권고]제2차 공청회 제시의견
권리	과제	소관부처			
사상 양심 종교	나. 입영 및 집총거부자 대체복무 편입	국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UP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심적병역거부자 비범죄화 및 수감자 석방·전과삭제, 민간 성격의 비처벌적 대체복무제 도입 	
권익 피해의 구제를 위한 권리	나. 군대 내 인권보호 시스템 강화 및 병영문화 개선	국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대 내 구타와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인권상황을 수시점검 ◦ 군복무 부적응자 관리시스템 개선 ◦ 군대 내 인권 및 고충상담 시스템 구축 및 외부 전문가와 연계 방안 마련 ◦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제도를 도입하여 군인권 보호 증진 ◦ 징계 입창 남용 억제 및 영창 시설환경 개선 ◦ 여군인권향상 개선방안 마련 ◦ 군대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과 차별금지 ◦ 군 체계적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적인 인권교육으로 전 군인의 인권의식 함양 		
		(국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법원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군사법제도의 지속적 개선, 장기적으로 평시 군사법원의 일반법원 통합방안 검토 		
건강 보건 및 환경권	사. 군 장병 의료 접근권 향상	국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병원 강화, 군인의 의료 접근권 확대를 통한 건강권 확보 		
병력자 및 성적 소수자		(국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형법 92조의 6(추행) 폐지 		
인권 교육	다. 공무원 및 인권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5) 군대 내 인권교육	국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대 내 대상별, 진급 주기별 인권교육 		

【 노인 · 고령자 】

제3차 NAP초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국제기구 권고	제2차 공청회 제시의견
권리	과제	소관부처			
신체의 자유	카. 보호시설에서 인권보호	보건복지부	○ 보호시설(정신보건시설, 사회복지시설)내 인권침해 방지		
노인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장성 강화 및 내실화	보건복지부		○ 제3차 UPR -고령자의 기초연금혜택 등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 -노인·장애인을 위한 연금 계획 등 모범 사례 창출 -취약계층 건강권 접근성 증진 ○ 사회권 -국민연금보장성 강화(자격요건, 금액) 및 지역기반 돌봄 제공, 노인학대 원인 규명 및 시설 등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학대 예방	
	나. 농지연금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			
	다. 노인학대 예방 및 상담·치유 프로그램 개발	보건복지부			
	라.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 인권 보호	보건복지부	○ 노인관련 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보장을 위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마. 다양한 단체·문화 활동 참여, 사회공헌 활동 접근성 강화	보건복지부	○ 다양한 단체나 문화 활동 참여, 사회공헌 활동 접근성 강화		
	바. 노인 소득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보건복지부	○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개선과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다양한 취업기회 보장		

【 외국인 · 이주민 및 재외동포 · 난민 】

제3차 NAP초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국제기구 권고	제2차 공청회 제시의견
권리	과제	소관부처			
외국인 이주민	가.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시행 및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수립	법무부	○ 다문화가족기본계획과의 통합 방안 모색	○ 제3차 UPR -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방지를 위한 법규 강화 및 문화 다양성 인식 제고 활동 지속 - 거주자와 이주민 간의 문화교류 장려를 위한 노력 - 모든 이주 노동자와 가족, 아동에게 충분한 생계수단, 주거, 의료, 교육 보장 - 취약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의 강제출국 및 보호소 구금 완전한 중단 ○ 제4차 사회권규약위원회 최종권고 - 국적에 관계없이 사회보장 등 사회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조치,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 (a) 다문화 가치 증진, (b) 문화다양성 확산 조치 모니터링	○ 3차 NAP 에 대한 평가 - 실질적, 실제적 평가에 근거하지 않은 형식적, 제도적 접근(사회통합프로그램 개선 필요)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가 - 인권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 못한 비포괄적 접근 • 지난 5년간 이주 인권 환경의 변화와 관련된 정책 과제 - 국제 인권 기구들의 권고 내용에 대한 개방적이며 전향적인 포용의 필요성 • 차별금지법이나 인종차별금지법 제정. 공공부문 내 인종차별금지 관련 내규의 마련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접근성 개선 ○ 추가적인 과제 - 인권 사각 지대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 • 미등록 체류자, 무국적자 및 무국적 아동, 외국인근로자 가족, 난민신청자, 국적 미취득 비혼 상태의 싱글맘 이주여성, 장기구금자, 범죄피해자 등 인권정책 사각지대 해소 - '외국인·이주민' 분야 종사 공무원의 인권 감수성 함양 및 처우 개선 • '외국인·이주민' 분야 공무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정기 실시 인권친화적 태도를 업무평가에 반영 • 관련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 제공
	나. 이민자 관련 정책 입안 시 당사자의 욕구 반영	법무부			
	다.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확대 지속	법무부	○ 사회통합정책 대상 확대 ○ 외국인의 사회 통합 활성화를 위한 비자 관련 법률, 취업·창업, 교육·양육, 생활 문화 등에 관한 온라인 외국어 종합 정보 서비스 제공		
	마.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계속	여성가족부			
	바. 농촌지역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사.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 보호시설 및 자활지원센터 확충, 다국어 긴급 상담 기능 강화 등 결혼이민자 및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및 인신매매 예방 및 피해자 구제 강화		
	아. 결혼이민자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	여성가족부	○ 보호시설 및 자활지원센터 확충, 다국어 긴급 상담 기능 강화 등 결혼이민자 및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및 인신매매 예방 및 피해자 구제 강화		
	차 .이민배경아동의 교육권, 건강권 보장	법무부 보건복지부	○ 이주노동자 및 무국적 자녀의 출생등록, 교육권, 교육권, 건강권 보장		
	카. 외국인 입국금지기준의 객관화 및 합리적 운영	법무부	○ 여권발급거부기준 및 외국인의 입국금지기준의 객관화, 합리적 운영		
재외 동포		(법무부)	○ 인종 차별 예방 및 문화다양성 존중을 위한 시민 교육 확대 시행 ○ 이주민에 대한 증오나 혐오 표현 선동·조장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나. 중국 및 구소련 체류자격(F-4) 부여	법무부	○ 중국 및 구소련 체류자격(F-4) 부여 -재외동포 자격(F-4)부여 확대(내국인 취약계층 취업 부문 고려) -중국 및 구소련지역 우수 재외동포 취업 유치		
	다. 재외동포의 사회통합	법무부	○ 재외동포 사회통합 -영주 또는 귀화동포의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 안전망 구축		
	라. 국내·외 재외동포의 인권상황 파악 및 개선	법무부	○ 국내외 재외동포의 인권상황 파악 및 개선 -국내체류 재외동포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행정지도 강화 및 재외동포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프로그램 시행		
	마. 국외입양인에 대한 인권 개선과 지원	보건복지부	○ 국외입양인에 대한 인권 개선과 지원 -국외입양인에 대한 기록 DB 구축 및 뿌리찾기, 국적 취득 지원		

제3차 NAP초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국제기구 권고	제2차 공청회 제시의견
권리	과제	소관부처			
난민	가. 난민 심사체계 고도화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 전담부서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난민인정 위원회의 실효성 제고 ○ 난민심사절차의 공정성을 위한 심사기준 수립 심사 시간 단축을 위한 인력 확충 ○ 공항항만에서의 난민인정 신청제도 개선, 송환대기 실(출국대기실)내 장기체류 방지방안 마련 		
	나. 난민에 대한 사회통합 강화 및 처우 개선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적 체류 허가자의 인정기준 수립 및 생계비, 가족 결합의 권리 등 기본권 보장 ○ 구금적 외국인 보호시설 외의 대안 마련 ○ 유엔난민기구(UNHCR)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난민지원체계 구축 ○ 난민인정자 등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 검토, 사법제도, 문화, 언어 등 한국사회 이해 교육실시 ○ 성폭력, 학대를 당한 난민의 심리적, 신체적 치유를 위한 지원정책 		

【 성소수자, HIV · AIDS 감염자 】

제3차 NAP초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국제기구 권고	제2차 공청회 제시의견
권리	과제	소관부처			
병력자 및 성적 소수자	가. 의료서비스 이용 차별 및 진료 거부에 대한 예방책과 피해자 구제방안	보건복지부	○ HIV / AIDS 감염인 인권 보호 방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감염 사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의료현장 적용방안 -의료서비스 이용 차별 및 진료 거부에 대한 예방책과 피해자 구제방안 -AIDS 환자를 위한 장기요양병원 사업 -진단/확진 통보 관련 가이드라인 배포 및 교육 -HIV/AIDS 교육 및 캠페인 통한 사회적 편견 해소 -국내 체류외국인에 대한 HIV 검사 개선방안 마련	○ 제4차 사회권규약위원회 최종권고 - HIV/AIDS 감염인들에 대한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 제공 및 건강권 보장	
	나. 사회적 소수자 인권교육 지속	경찰청 (국방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 학교 교직원, 공무원(경찰, 군대 포함) 및 보건의료 종사자에 대하여 사회적 소수자 인권교육 지속		
		(보건복지부)	○ 한센인 인권보호 방안 -한센인 생활지원 대상 확대 -호스피스 제도 신설 -고향찾기 사업 등 한센인의 심리정서적 안녕 증진과 고향 주민들의 인식개선		
		(고용노동부)	○ B형 간염인 인권보호 방안 -고용상의 차별 해소 -공익캠페인 및 교육 등을 통해서 B형 간염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 개선		
		(보건복지부)	○ 결핵 환자 인권보호 방안 -환자의 보호와 권리를 고려한 결핵예방법의 내용 정비 -복약확인치료사업(DOT, Directly Observed Treatment)의 실효성 제고 -입원 격리치료 명령에 대한 환자의 이의제기권 보장 -자발적 격리를 통한 치료 보장의 검토 -차상위계층 활동성 결핵 환자에 대한 입소형 결핵관리시설 확충 -활동성 결핵 환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핵환자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 개선		
		(보건복지부)	○ 성전환 수술비용에 대한 건강보험의 단계적 보장 검토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인권 】

제3차 NAP초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국제기구 권고	제2차 공청회 제시의견
권리	과제	소관부처			
북한이탈주민	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제도 개선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보완 및 강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한 정착프로그램 -성인지 치유 및 교육을 포함한 여성 북한이탈주민 정착프로그램 ○통일 및 인권교육 연계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인권 전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위한 대국민 인권교육 및 홍보 -통일교육과 인권교육의 연계		
	나.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 지원 강화	통일부			
	다.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정착 지원	통일부			
	라.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 적응력 강화	통일부			
북한인권	가. 「북한인권법」에 따른 사업 등 북한인권 증진 추진	통일부 법무부	○북한인권법 시행과정에서 관련 기구 간 협력 -북한인권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방향 정립 -북한인권자문위원회, 북한인권재단,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업무협력 제고, 북한인권재단 운영시 정부와 민간의 협력 -통일부, 법무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협력체계 구축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등 3대 인도적 현안에 대한 조치		
	나. 남북 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 ▶ 대북 인도적 지원 지속 ▶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지속 ▶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 추진	통일부			
	다.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통일부 외교부			
	라. 북한법과 통일이후 통합법제 심층연구	법무부 통일부			
	마. 통일에 대비한 인권정책 수립	법무부 통일부			

【 국제인권규범 이행 및 국내외협력 】

제3차 NAP초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국제기구 권고	제2차 공청회 제시의견
권리	과제	소관부처			
국제인권규범이행	가.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추가 가입·비준	법무부	○ 미가입 인권조약 비준 및 가입 인권조약의 유보 조항 철회	○ 제3차UPR (연번 1)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협력 -ILO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98호), 강제노동 금지(29, 105호) 등 4개 핵심 협약 비준 -미비준 4개 핵심협약 비준 준비를 위한 국내법 등 검토 -주요 국제인권조약 및 지역인권규범 비준을 위한 포석으로 국내법제 개정 검토 -OHCHR 서울사무소 지원 -유엔과 유엔인권메커니즘에 기여·사업 계속 -강제실종 협약의 비준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사형제) 비준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 고려 및 관련 연구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작용에 관한 협약 비준 -침략범죄에 관한 로마규정 캄팔라 개정안 비준 -핵무기 금지조약에 서명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 -유네스코차별금지협약 비준	제3부 사회권(노동권) ○ 기타 제안 - 최소한 결사의 자유 ILO협약 비준 ... 담겨야 제2부 장애·이주(이주) ○ 3차 NAP 에 대한 평가 - 국제 인권 기구들의 권고 내용에 대한 개방적이며 전향적인 포용의 필요성 • 차별금지법이나 인종차별금지법 제정, 공공 부문 내 인종차별금지 관련 내규의 마련 제4부. 기업, 여성, 아동(아동) ○ 거주이전의 자유 관련 - 민법상의 거소지정권과 아동복지법 상 아동의 복지시설에의 보호조치가 헌법·아동권리협약의 기준에 타당한지 검토 필요 ○ 기타 제안 - 아동권은 다른 인권분야에 비해 시민사회의 활동도 부족하고 권리 보호도 낮은 수준이므로 최소한의 국제인권기준이라도 잘 담아야 함 - 국제 기준과 국내의 제도적 현실 사이의 차이(GAP) 도출·현황 파악이 필요
	나.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유보 철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미가입 인권조약 비준 및 가입 인권조약의 유보 조항 철회		
	다. 국제인권메커니즘에 따른 국가보고서 작성·제출 및 심의, 방문조사 대응	법무부 외교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 인권조약의 국가보고서 작성, 심의 및 이행 과정에서 시민 사회 참여 확대		
	라.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 이행을 위한 조치	법무부			
인권 관련 국내외	가. 국제인권 논의에 적극기여 및 국제사회에서 역할 강화	외교부	○ 국제인권 관련 논의에 적극 기여와 국제사회의 역할 강화	○ 제4차 사회권규약위원회 최종권고 -ODA(공적개발원조) 관련, GNI 대비 0.7%로 증가시킬 것, 유무상 원조 비율 개선시킬 것 (21)	

제3차 NAP초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국제기구 권고	제2차 공청회 제시의견
권리	과제	소관부처			
협력	나. 국제인권기구와 교류협력 강화	외교부	◦지역 및 국제 인권기구와 교류협력 강화		
	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와 기부문화 지원	행정안전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와 기부문화 지원 ◦시민사회의 인권정책추진체계 참여 확대		
	마. 공익적 시민단체 지원	행정안전부	◦지역인권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 및 역량 강화 ◦공익적 시민단체 지원		
		환경부	◦시민사회 인권역량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 확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계획 수립		

【 기업인권】

제3차 NAP초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국제기구 권고	제2차 공청회 제시의견
권리	과제	소관부처			
기업과 인권	가. 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대표명 및 교육홍보	외교부 산업부	<p>○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대표명 -정부는 신문, 인터넷, 소셜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에 대해 정부의 기대 표명 -정부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인권에 대한 정부의 기대에 관하여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실시</p> <p>○기업과 인권정책 일반 -정부는 기업의 활동과 관련된 법령 제개정시 인권적 측면 고려 -정부는 중소기업에서의 근로기준법 위반, 소비자의 생명건강안전을 침해하는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대책 마련 -정부는 UN기업과 인권이행지침,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기업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교육 실시 -정부는 일정규모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인권관련 정보에 대한 공시제도 마련 -인권경영 추진 모범적인 기업사례 발굴 및 홍보</p> <p>○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제도화 -정부는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제도화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인권경영 정책선언, 실천점검의무를 시행하고 그 성과 공개 -정부는 공공기관이 수출 관련하여 신용정책금융을 제공하거나 일정규모 이상 투자하는 경우 대상기업의 인권적 측면을 고려하고 그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권장 -정부는 공공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배포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권장</p> <p>○정부정책의 일관성 확보 -정부는 기업과 인권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관련 공무원, 정책대상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절차 마련 -정부는 기업과 인권 정책에 관련된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재 개발 및 온라인 교육을 포함한 교육훈련 제공 -정부는 기업과 인권 NAP의 이행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p>	<p>○제3차 UPR -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이행을 위한 NAP 개발 - 인권에 기반한 개발 채택</p> <p>○제4차 사회권규약위원회 최종권고 - NAP에 다음을 포함, (a) 기업의 인권책임에 대한 법적 의무 수립(실사포함), (b) 국내외인권 기업의 침해 사례에 대한 (비)사법적 구제 보장, (c) 공공조달 등에 인권 기준 반영, (d) NCP 투명성, 효율성 강화</p>	<p>○기업과 인권 분야에 대한 평가 - '사회적책임'이라는 용어 대신 '기업과 인권 또는 인권경영에 대한 책임(책무)'로 사용</p> <p>- 유엔 이행원칙을 기준으로 하고, NCP 개선 방안은 구체성이 필요</p> <p>- 다자간 국제기구 인권보호는 국내 시민단체와 인권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필요</p> <p>- 국가인권위와 긴밀히 협력해 인권교육 등 기업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p> <p>- 기업의 이행원칙 이행에 대한 지원 계획이 필요</p> <p>- 노사정위원회, KOTRA, KOICA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한국기업의 해외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p> <p>- 인권실천·점검의무(Due diligence)의 제도화 필요</p> <p>- 국내 기업과 인권 이행을 위한 기업, 정부, 노조, 투자자, 소비자, 시민사회, 언론 등으로 구성된 다자간 포럼 구축 고려</p> <p>- 국제적 추세와 시급성 등에 따라 독자적 기업인권 NAP 수립 필요</p> <p>- 기업과 인권 관련된 국내외 규범·제도에 대한 이해</p> <p>- 유엔의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NAP 평가 방법을 연구할 것</p>

제3차 NAP초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국제기구 권고	제2차 공청회 제시의견
권리	과제	소관부처			
	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공공조달	조달청	○ 인권을 고려한 공공조달 -정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인권을 고려하는 제도 및 절차 마련		
	다. 정부 기반 구제의 실효성 제고 - NCP 운영 활성화	산업부	○ 정부 기반 구제의 실효성 제고 -정부는 OECD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NCP 위원구성 운영절차 마련, NCP 기능 등에 대한 홍보 강화 -정부는 기업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집단소송제도 등 효과적인 구제제도 마련		
	라. 다자간 국제기구에서 인권보호	외교부	○ 다자간 국제기구에서 인권보호활동 -정부는 기업관련 다자간 국제기구에서 참여 활동할 때 인권적 측면고려 -정부는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을 실행 및 홍보하는 국제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 ○ 분쟁지역에서의 기업의 인권존중 활동 지원 -정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인권을 고려하는 제도 및 절차 마련 -정부는 분쟁지역 광물의 책임 있는 공급망에 관한 OECD 실천 점검의무 안내서 등 분쟁지역 관련 국제기준 등에 대한 홍보교육 강화 -정부는 분쟁지역에 진출하였거나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이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상담 지원 프로그램 개발		
		(산업부) (외교부)	○ 비정부 기반 고충처리절차 지원 및 실효성 제고 -정부는 개별 기업의 인권피해자를 위한 고충처리절차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지원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부 기반 고충처리 절차가 설치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 -정부는 ILO 등 국제적 차원의 고충처리절차 홍보		